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3년 11월 3일(금) 13:00 이후

담 당 : 경제정책본부 김 형 규 차장
(990-7092)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 개최

부산시민, 국회 본관 앞에서 21대 정기국회 회기 내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 **산업은행 부산이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새로운 동남권 구축의 첫 걸음**

▶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등 100여명 상경하여 산은법 연내 개정 촉구 성명발표**

한국산업은행법 조속 개정하라! 한국산업은행 이전으로 지방시대 앞당기자!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산업은행 부산이전의 마지막 걸림돌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을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부산시민의 함성이 국회 본관에 울려 퍼졌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장인화)는 산업은행법 조속 개정을 위해 지난 9월 출범시킨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가 3일(금) 12시,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경제계 대표,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추진협의회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절반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황을 강하게 질책하였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책임질 첫 출발점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목소리를 여·야 국회의원들 앞에서 표출하고,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이날 행사는 추진협의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장인화 부산상의 회장과 여·야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한 김희곤 국회의원과 박재호 국회의원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의 성명서 발표 및 피켓 퍼포먼스로 마무리 하였다.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산업은행 부산이전은 금융산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동남권 산업벨트를 확장하고, 지역에 양질에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동남권 전체의 발전을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이라면서, “이러한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국회 시정연설에서 특별히 산은법 개정을 요청하신 만큼 여·야 모두 산업은행 부산이전이 돌이킬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 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부산지역 시민대표들은 21대 정기국회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성명서 낭독에서 “지난 5월 정부가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고시하고 한국산업은행 이전 방안 용역 역시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계획을 채택하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면서, “동남권의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데 마중물이 될 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절차인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 을 촉구하였다.

오늘 발표한 성명서는 행사에 참석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양당에 전달되었다.

첨 부 1. 행사개요 및 성명서 1부.
2. 행사사진(행사 직후 별도 송부) 1부.

한국산업은행법 국회 통과 촉구 결기대회 개요

1. 추진배경

□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실현 목표

□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대한 강력한 지역사회 의지 표명 및 대국민 공감대 형성

2. 추진계획(안)

□ 일　　시 : '23. 11. 3.(금) 12:00(예정) ※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이후

□ 장　　소 : 국회 본관 앞

□ 주　　최 : 산업은행부산이전추진협의회

□ 참석대상 :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100여명

□ 내　　용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시간계획(안)

시　간(20')		내　용	비　고
11:30~		이 동	제1간담회실→본관 계단
12:00~12:02	2'	개 회	사회(참석자 소개)
12:02~12:12	10'	인사말씀	상의회장, 여.야 국회의원
12:12~12:17	5'	성명서 낭독	추진협의회 대표 등
12:17~12:20	3'	구호제창(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21대 정기국회「한국산업은행법」개정
촉구 성명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1,000대 기업 75%, 벤처투자 67%, 인구 51%가 몰려 지역경제는 갈수록 쇠퇴하고,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뉜지 오래다.
이제, 수도권을 한 축으로 힘겹게 굴러가는 대한민국이 아닌, 안정감 있는 두 바퀴로 굴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은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형성하는 마중물이 되어 저성장의 늪에 갇힌 대한민국을 수도권과 남부권 두 개의 축으로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으로 고시하면서 이전에 첫 발을 뗐고, 한국산업은행은 이전 방안 용역을 통해 필수불가결한 일부 업무 외에 모든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 이전' 방안을 채택하는 등 행정절차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이지만, 현재 법 개정은 답보 상태다. 경제논리로 포장된 수도권 일극주의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반대한다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 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현재, 여·야 의원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여·야 국회는 한국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조항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1의 항구도시이자 해운·조선·물류 산업의 중심지이고, 부산을 포함한 동남권은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국가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벨트가 구축되어 있다. 또한,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금융기반 조성, 정책금융, 디지털금융 등 다양한 금융기능을 집적해 오고 있다.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단순히 공공기관 하나를 이전하는 차원을 넘어 부산을 비롯한 남부권 경제벨트를 살리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여 부산과 서울 양대 성장 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산업은행이 조속히 부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국회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 11. 3.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 일동